



사진 출처: 이석기 의원실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국당위원회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관련 기사 2면

청와대와 검찰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3면

홍콩 투쟁과
중국 광둥성 투쟁

5면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방한 강연
급진적·혁명적
좌파의 위기

6~8면

격동의 이라크·이란·
팔레스타인

9면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10면

김용균 1주기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1, 12면

문화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4면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차별에 반대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김영익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게 주된 목적인 듯하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서울시교육감 박노현 같은 인사들이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물론 일부 양심수들을 사면해 생색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듯하다. 이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강연을 했다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 형을 받고, 7년째 독방에 장기 구금돼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포함된 '지하혁명조직(이른바 RO)'이 내란을 음모했다고 고발했다.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터진 일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악명 높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등 공작 정치에서 일가견이 있는 자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내란 음모라는 충격적인 범죄 혐의를 거론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 했다.

국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 음모를 획책한 증거로 그해 5월에 열린 강연회 녹취록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녹취록은 여러 곳이 위조됐음이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1심에서 녹취록의 450여 곳, 2심에서는 400여 곳을 수정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면

박근혜 정부는 떠들썩하게 마녀사냥을 벌였지만,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을 실제로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증거를 끝까지 내놓지 못했다. 박근혜와 재판 거래를 했던 당시 양승태의 대법원조차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이지만 내란 선동 혐의 등을 유죄라고 판결하며,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활동가들에게 중형을 내렸다. 강연회 발언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선동"이라면서 말이다. 이는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석기 전 의원과 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했을 뿐인 정치 사상을 단죄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이다.

'내란 음모' 마녀사냥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다. 게다가 양승태의 대법원이 이 사건을 두고 청와



이석기 전 의원의 변호인단이 7월 20일 이석기 전 의원의 변호인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밝혔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표 적폐 외면 말라 7월 20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대와 물밑에서 거래를 했음이 폭로됐다. 양승태가 대법원장일 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국내외 진보 단체와 인사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문재인에게 끊임없이 이 의원 석방을 요청했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작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사뭇 다르게 행동한다. 소위 'RO 회합'과 달리, 기무사 계엄 문건은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 군부가 쏫볼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쿠데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그러나 여태껏 이 문건과 관련해 제대로 처벌받은 군부 인사는 없다. 처벌은커녕 수사도 중도에 멈췄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12월 7일 청와대 인근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를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는 외면 말고 이석기 전 의원과 양심수 전원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일시 : 12월 7일(토) 오후 2시
장소 : 청와대 인근
주최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프랑스 연금 개혁 저지 대파업, 전국 강타 예고!
- ★ 시애틀 항쟁 20주년 — 위대한 반자본주의 항쟁
- ★ 소방관 국가직 전환 첫발 뒀으나 갈 길 멀다
- ★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비극
- ★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일용직 강요하는 정부
- ★ 《테스토스테론 렉스》, 《젠더, 만들어진 성》 서평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맹회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년 3월 30일 개정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김문성

12월 4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냥하는 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당시 울산시장 이자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조국 일가 수사로 불거진 청와대·여당과 검찰 사이의 갈등 수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듯하다. 이 갈등에는 몇 가지 쟁점이 섞여 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권력형 부패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민정수석실

유재수에 대한 반부패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지시에 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실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현재 진술이 엇갈리는 듯하다. 조국,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3인이 회의로 결정했다는 증언이 있는 반면, 3자 회의는 요식이고 조국이나 백원우의 뒷전에서 걸려온 전화로 감찰 중단이 결정됐다는 증언도 있다.

특정 인물의 부패 의혹 수사가 더 심
각한 권력형 부패 의혹을 드러내는 패
턴이 이번에도 다시 나타난다.

유재수 검찰 무마 건은 그가 이후 검찰 수사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해 간 것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조국 수사와의 연관판) 상상인금융그룹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자 자격(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문제가 유재수의 관할이기도 했다. 상상인의 자금이 조국 일가뿐 아니라 다른 권력층으로도 흘러갔는지가 핵심 의혹으로 보인다.

백원우는 지난해 초 민주당 측의 온라인 여론 공작이 드러난 드루킹 수사에서도 그 이름이 등장한 바 있다. 드루킹이 김경수(사건 당시 의원, 현 경남도지사)에게 추천한 주일대사 후보자를 직접 만난 것이 백원우였다. 백원우의 정권 내 위세를 봤을 때, 실질적인 인사 청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원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건에서도 이름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실무자로서의 심판다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파견 시절에는 백원우의 지휘 하에 있었다.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백원우의 지시 여부, 백원우의 뒷선을 증언해 줄 인물이 없어진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12월 4일 오후 김기현 관련 첩보 제보자는 숨진 수사관이 아니라 또다른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행정관에게 제보한 당사자는 현 울산부시



뒷조사 권한을 이용해 특혜를 감쌌나? 오른쪽부터 민정수석실을 운영한 조국, 백원우, 박형철

장이라고 한다.

물론 숨진 수사관의 죽기 직전 근무처인 서울동부지검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압력이 청와대와 검찰 중 어디에서 왔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이 의혹들 중 일부는 지난해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의 입에서 나왔다. 김태우는 감찰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얻으려다가 실패하자 보복성 폭로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폭로의 동기와 그것의 사실 여부는 달리 다룰 수 있다.

당시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관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이번에 백원우 이름이 이곳에서 확인된 것이다. 백원우는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되기 전, 노무현 정부 임기 첫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었다.

그런데 백원우뿐 아니라 여러 핵심 의혹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노무현 청와대에 근무하며 문재인과 가깝게 지냈다.

유재수 의혹에 등장하는 윤건영(문재인)의 복심이라는 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호철(문재인 최측근), 유재수 본인, 드루킹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마찬가지다. 버닝썬 수사 방해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 총경 출신 윤규근도 노무현·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노무현 주치의 출신 이상호가 운영하는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건에는 양정철(또 다른 문재인 최측근)과 함께 윤규근이 또 등장한다.

결국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의 측근이었던 인사들이 ‘이너서클’(권력 실세)을 이루고 민정수석실의 뒷조사 권한 등을 이용해 검찰·경찰 일부와 유착해 특혜를 공유하며 권력 농단을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법하다.

검·경 충돌로 번지는 “검찰 개혁”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은 김기현 측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별개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듯하다. 김기현은 선거무효소송을 걸겠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지방선거는 울산에서 울산시장뿐 아니라 시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싹싹이혔다. 울산과 함께, 부산, 경남 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에게뿐 아니라 진보 정당들에게도 전통적으로 열세였었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 촛불의 여파 속에서, 반성의 여지가 없는 한국당 심판 선거였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김기현 측은 무혐의 처분
한 것은 검찰이었다. 울산 검찰청이 수
사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혐의라
며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즉, 검찰과
경찰이 수사 지휘권과 검찰의 기소 독
점권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한 사건임
을 알 수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청와대의 제보를 받아 울산시장 김기현과 그 측근들의 비리 건을 수사한 황윤하는 경찰 내에서도 강경한 검·경 수사권 조정파다. 그는 아예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즉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이 기소권만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수사권 갈등은 부패하고 억압적인 권력기관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일 뿐이므로, 어느 편이든 수사권 강화도 진보가 아니다.)

숨진 전 검찰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에게도 청와대·경찰과 검찰 사이의 정면 충돌이 당혹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됐을 듯하다. 그의 유품(휴대전화)을 두고 경찰과 검찰 간에 노골적으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을 보라.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기습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경찰은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점을 봐도, 울산시장 수사 건과 일명 “고래고기 사건”이 전혀 무관한 건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 경찰이 고래를 불법 포획해 그 고기를 불법 유통 시킨 업자들을 적발해 처벌한 사건이다. 그때 경찰이 압수한 냉동 고래고기를 검찰이 업자들에게 돌려줘 버렸고 그것에 수사 책임자 황운하가 반발했다. 사실상 장물을 도둑에게 돌려준 격인데, 이 업자들의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라서 그랬다는 설이 유력하다.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켰다는 면에서 울산시장 건과 고래고기 건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번 울산시장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눈엣가시이던 황운하를 수사 표적에 넣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황운하는 최근 경찰을 대변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바람에 '명예퇴직'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기현의 부패 여부와 별개로 청와대와 유착한 것이 드러나면 불명예 퇴직해야 할 수도 있다.

검찰은 지금 정권의 권력형 부패 의혹(그중 일부는 경찰과의 유착)이 점차 드러나는 것을 이용해,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게 일부 나눠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공식정치|의 분열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황교안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세월호 특별수사를 시작하면서 봉합되는 듯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권이 검찰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자 청와대와 경찰, 검찰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당은 박근혜 퇴진 과정에
서부터 적폐 청산 수사 때문에 윤석열
을 강경하게 비난해 왔다. 윤석열의 검
찰총장 임명도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
부와 검찰의 깊어지는 갈등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약화시키려고 '검찰 개
혁'에 반대하고 있다.

검찰에 힘을 실어 주 청와대와 검찰을 이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최근의 의혹들이 권력형 부패 게이트로 번져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하게도 한국당 자체도 내분에 빠져 있다. 회복되지 않는 지지율이 내분의 진정한 쟁점이다.

청와대와 검찰, 경찰이 서로 엮인 권력 다툼과 갈등이 상대방 뒤집기와 보패 폭로로 이어지고 있다. 이 틈에서 조금씩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부패 의혹이 본격적으로 낚새를 피우기 시작했다. 문재인으로서의 김대중 정부의 옷로비 사건이나 노무현 정부의 대선 자금 비리 등을 떠올릴 만하다.

한편, 주류 양당이 부패로 만신창이가 되며 갈등을 벌이면서도,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 고통전가하기 등은 합심해 추진한다면, 문재인 등장 이후 겨우 수습된 정치구조의 안정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상황 이면에는 미·중 갈등이 한국 자본주의에 가하는 경제적·지정학적 압력이 크고, 주류 양당에게도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 지배자들은 신경질적이 돼 가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대중의 불신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 현실이 놓여 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좌파적
인 계급정치를 발전시켜야 할 때다. 한
국당의 부활을 막겠다며 민주당을 (비
판을 곁들이긴 하지만) 펀드는 온건한
개혁주의로는 오히려 윤신의 폭만 좁
혀질 뿐이다.

문화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이현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화상이 지난달 방일 당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1+1+α안’(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에게 자발적 기부금 받아 위자료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문화상은 12월 중순경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화상 안에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안이 국회의장 문화상의 독자적 구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특별법을 토대로 12월 말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두 국가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서 ‘1+1안’(한·일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배상)을 전혀 제기하지 않는 이 기만적인 안조차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했다. 법적 책임(배상)은커녕 도의적 책임도 인정하기 싫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기서 더 후퇴해 일본 국가와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더 흐리는 1+1+α, 2+2+α 따위의 안들이 정부·여당 측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서 대중을 기만하더니, 이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서도 배신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화상 안은 민간기금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과 10억 엔에 일본 국가의 책임을 면해 준 한일 위안부 합의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이 포함되지 않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못한 최악의 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상의 애초 안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일환이던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 60억 원을 포함하는 내용도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당연한 반발 때문에 이 부분은 철회했지만, 본질은 변한 게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돈만 지급하면 된다는 발상이 “피해자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고 “일본 국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12월 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12개국 43개 단체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문화상 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민중당도 문화상 안을 비판했다.

심지어 문화상 측이 작성한 법률안 초안에는 한·일 정상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누구를 위한 ‘해결’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고자 한국 법원에서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길게는 18년이 지났다. 일본과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한 때까지 거슬러 가면 30년 가까이 된다. 그러는 동안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원고 5명은 모두 고



일본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죄가 먼저다 11월 27일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이 주최한 국회 앞 기자회견

인이 됐고,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인내한 결과가 고작 이 따위란 말인가.

정부·여당 내에서는 문화상 안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 안으로 주목받는 듯하다. 일본 지배자들 내 일부가 이 안을 긍정하는 기류도 읽히면서 더 힘을 받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현실론에 힘을 실었다. 분노스럽게도 자유한국당 의원 홍일표는 “일본에게 돈 달라는 구차한 얘기를 이제 그만하자는 취지”(《한겨레》 11월 30일자)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그러나 이런 ‘현실론’은 결국 한·일 국가의 경제·안보협력과 기업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대충 덮고 가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경제·안보 관계 진전을 분리해 다루겠다는 ‘투 트랙’ 기조를 따랐다. 지소미아 재연장에 이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신 조짐은 이 기조의 본질이 명백히 후자에 전자를 종속시켜 일본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보여 준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과거 청산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구축하려 한 전후 질서(당시에는 대(對)소련, 현재는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집단안보체제) 아래서 번번이 묻혀 버렸다.

1960년대에 미국은 집요하게 한국과 일본에 국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 뛰어들길 원했던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호응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자금

을 얻는 대신 식민지 피해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민중의 고통을 희생시킨 것이다.

이 덕분에 면죄부를 받은 일본 지배자들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외면해 왔다. 지금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천인공노할 일본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일본 지배자들의 군사대국화 계획과 관련 있다. 과거 제국주의 전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또다시 군사대국화를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동한다.

강제징용·위안부 문제가 단지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의 제국주의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는 이유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지지하며 이에 협력하는 대가로 혜택을 누려 온 한국 지배자들도 이 문제에서 대다수 한국인의 바람을 계속 외면해 왔다. 역대 한국 정부들은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 뭔가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다 이내 꼬리를 내리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민주당 정부라고 다를 게 없었다.

한·미·일 동맹과 민주당 정부

김대중은 강제동원·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2001년에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들끓었을 때 항일 제스처를 취했지만 잠깐이었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일 관계는 ‘새로운 발전의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받는다.

실로, 국무총리 이낙연과 문화상은 ‘김대중-오부치 시대’를 한·일 관계



탄광 강제노역에 동원된 조선인들 일본 나가사키 아소 탄광에서 강제노역한 한 피해자는 “그 곳이 매 맞으며 일한 지옥”이라고 말했다

의 본보기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 간 체계적 군사·안보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한일안보정책협의회(1998), 한일 공동해난구조 훈련(1999) 등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심지어 2002년 동티모르에서 파견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는 같은 지역에 주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평화유지군(PKO)의 일부로서 협력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밀려 한일협정 당시의 비공개 외교문서를 일부 공개했다.

2005년 8월, 당시 국무총리 이해찬(현 민주당 대표),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이 포함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도의적 차원의 보상은 이뤄졌다고 봤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봤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

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한 게 없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 줬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는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문재인 정부에게 우선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줬다. 세계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 미국·일본과 여러 면에서 얽혀 있는 한국 국가가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리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커다란 대중적 반감을 의식해 다양한 꾀수를 부릴 뿐이다.

미국·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것과 함께, 여기에 협력해 온 한국 정부에도 맞서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과거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 항쟁은 계속된다

이원웅

12월 1일 홍콩 대중이 다시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였다. 수만 명이 홍콩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거리 행진의 주요 구호는 “초심을 잊지 말자”(毋忘初心)였다. 11월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친(親)중앙정부 세력을 참패시킨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은 것이다. 11월 27일 트럼프가 홍콩인권민주법에 서명하자 적지 않은 시위대가 여기에 환상을 갖고 성조기를 흔들며 환영한 것도 잠깐이었다.

시위대는 다시 “5대 요구, 하나도 빼먹지 마라”, “경찰을 즉각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날 집회는 경찰이 허가한 집회였지만 저녁이 되자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쏘고 최루 스프레이를 뿌렸다.

구의원 선거 즈음 홍콩이 “평화”를 되찾았다고 국내외 언론들이 다소 성급하게 보도했지만, 그런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과격파가 또 뻔한 전술에 의지한다”며 투덜거렸다.

그동안 대규모 집회를 주최해 온 민간인권전선은 12월 8일 다시 집회 일정을 잡았다.

도심지에서 직장인들이 매일 벌이는 “점심 시위”도 재개됐다. 특히 12월 2일 점심 시위는 광고업계 노동자들의 파업과 맞물렸다. 이 노동자들은 6일까지 5일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홍콩노총(HKCTU)에 따르면 사회복지 노동자들도 12월 17~19일에 파업을 벌인다.

홍콩 노동자들은 이번 항쟁을 계기로 곳곳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특히 학창 시절에 2014년 우산혁명을 경험한 청년들이 노동조합 물결의 주축이라고 한다. 이들은 노동자가 생산에서 점하는 지위를 이용해 항쟁의 요구를 쟁취하려 한다. 구의원 선거 이틀 후인 11월 26일에 홍콩노총(HKCTU)이 발표한 다음과 같은 호소가 이런 정서를 잘 보여 준다. “항쟁은 한 번의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



12월 1일 홍콩 대중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다. ... 그동안 많은 부문에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우리의 동지들이 각계에서 더 많은 노동조합을 건설하기를 바랍니다. 이후 운동에 필요한 “총파업”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홍콩 항쟁이 전진하려면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자들이 더 많이 항쟁에 참가하고, 특히 파업이라는 노동계급의 고유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홍콩 대중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 본토 대중에게서 지지를 얻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 본토에서도 홍콩 항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새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우회해 개설한 온라인 포럼 ‘핀공’에는 중국 본토 대학생들이 자필로 쓴 홍콩 항쟁 지지 메시지와 신원을 가린 학생증을 함께 찍은 사진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최근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마오밍시 주민들이 벌인 화장터 건립 반대 시위도 눈여겨 볼 만하다. 홍콩 항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당국은 시위대에 즉각 경찰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을 했다. 처음에 주민들은 경찰에 항의해 “홍콩이나 진압하라” 하고 구호를 외쳤지만, 금세 구호는 “우리가 홍콩이다”로 바뀌었다. 주민들은 아예

홍콩 항쟁의 구호를 차용해 외쳤다.

서방 언론들은 종종 홍콩 대중과 본토 대중의 갈등과 정서적 거리감을 부각하지만, 마오밍시 시위는 투쟁 과정에서 이것이 금방 뒤집힐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또, 홍콩에서 항쟁이 지속되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 본토 대중이 자신의 요구를 걸고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만으로도 시진핑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홍콩 항쟁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8일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민간인권전선 주최 집회에 맞춰 서울에서도 홍콩 항쟁에 연대하는 청년·학생들의 집회가 열린다. 한국 노동자·청년들도 홍콩 항쟁에 꾸준히 지지를 보내자.

시진핑·캐리람 정부의
살인 진압 규탄! 홍콩 항쟁 지지!

**세계인권날 기념
학생·청년
홍콩 항쟁 연대 행동**

12월 8일(일) 오후 3시 주한 중국대사관 앞

공동 주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디어스누, 정의당 청년원모임, 모멘텀, 홍콩 민주 항쟁을 지지하는 연세인 모임 (가나다 순, 추가 중)

항쟁이 본토 남부로 번질까 우려하는 시진핑 정부

한수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11월 28일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마오밍시의 원러우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다. 생태공원을 짓기로 한 공공 부지에 화장장을 함께 짓는다는 계획에 반발하며 일어난 시위였다.

중국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강경하게 시위를 진압했다. 시위 참가자를 마구잡이로 체포했다. 경찰들은 거리를 봉쇄한 채 집을 돌며 시위 참가자를 색출했다. 한 주민은 웨이보(페이스북과 유사한 중국인들의 소셜미디어)에 시위 소식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시위 관련 사진과 동영상은 웨이보에서 대부분 삭제됐다.

동시에 당국은 시위 하루 만에 화장장 건립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시위 참가자 200여 명을 석방했다고도 한다. 저항의 불씨가 홍콩에서 내륙으로 옮겨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주민들은 경찰 탄압에 항의하며 홍콩 사람들의 구호를 차용해 “마오밍 광복, 시대혁명” 하고 외쳤다. 주민들은 정부가 화장장 건립 계획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며 시위를 지속하려 한다. 시위 참가자들은 홍콩에서 온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운동은 당신네 홍콩과 똑 닮았다.”

제조업이 밀집한 중국 광둥성은 노동자 투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자, 홍콩의 저항이 가장 번지기 쉬운 인접 지역이다.

전전금근

시진핑 정부는 홍콩 항쟁의 불씨가 본토로 번지는 것을 걱정한다. 본토 대중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2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는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얼굴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거의 모든 중국인의 신원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페미니스트 활동가이자 기자인 소피아 황쉐친은 홍콩 항쟁을 지지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죄목은 “싸움과 분쟁을 촉발한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중국인이자 사업가인 라이리후 씨는 홍콩 항쟁을 상징하는 노래 ‘홍콩에 영광을’(Glory to Hong Kong)을 웨이보에 올렸다는 이유로 연행됐다. 그의 죄목 또한 “싸움과 분

쟁을 촉발한 죄”였다.

허난성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갈수록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예요. 우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조차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홍콩 항쟁을 지지하지만 직장을 잃을까 봐 아무 말도 못한다고 했다.

시진핑 정부는 홍콩 항쟁 지지를 표명한 사람들을 위협하며 본보기를 보여 주려 한다.

인터넷 통제

중국에서는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같은 인터넷 서비스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 접속을 모두 제한한다. 많은 중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이런 제한을 우회하기도 하지만 중국 지배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 또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올해 9월 시진핑 정부는 건국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9월 16~22일을 인터넷 안보 주간으로 지정해 인터넷 감시와 통제 수위를 높였다.

현재 중국 지배자들은 홍콩 대중과 중국 본토 대중을 분열시키기 위해 간힘을 쓴다. 이런 분열 공작과 탄압, 통제는 중국 지배자들이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확산을 끔찍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시진핑의 참석이 예상되는 마카오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11월 30일 중국 경찰은 마카오와 홍콩을 연결하는 강주아오 대교 입구에서 가상 ‘폭도’를 진압하는 훈련을 했다. 홍콩 시위대가 마카오로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다.

세계경제 위기와 맞물려 중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지배자들에게 중국 노동계급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시한폭탄 옆에 홍콩 항쟁이라는 불길이가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 저항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일어나지만, 그 공통된 근본 원인은 중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모순에 있다. 시진핑 정부의 거세지는 탄압과 통제는 중국 본토 노동계급과 청년들의 불만을 더 키울 뿐이다. 홍콩과 중국 본토 대중에게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울 공동된 이해관계가 있다. 이들이 단결해 싸울 때 홍콩 항쟁 역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축약한 기사입니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광둥성 마오밍시에서 벌어진 시위 홍콩처럼 보이지만 중국에서 펼쳐진 광경이다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님의 홍콩 항쟁 지지 메시지:

“선거 통해 확인한 민심, 밀고 가 승리하길”

지금 홍콩 학생들 죽어 나가는게 제일 가슴이 아파. 단 한 명도 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용기내라든지,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 나는 이한열이 한테는 시위 나가도 맨 앞에 서지 말고 뒤에 서 있으라 했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이한열이는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간 거란 말이야. 이한열이는 광주 사

람인데, 대학에 가기 전까지 광주에서 그 사단이 났다는 걸 몰랐단 말이야. 대학에 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야. 그거 때문에 계속 앞에 나갔던 거야. 광주 사람이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면데.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거지.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그대로 쪽 밀고 가라는 얘길 하고 싶어. 그럼 다들 다치지 말고 승리하길!

인터뷰·정리 오제하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님

▶ 7면에서 이어짐

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차별 문제를 다룰 때 계급 정치와 결별하고 개인적 투쟁으로 회귀하는 것을 열어 두게 됩니다.

ISO

미국 ISO를 사례로 삼아 이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ISO 해산이 여러모로 충격적이었기에 사례로 드는 것입니다.

미국 ISO는 헬 드레이퍼가 주창한 사상을 중심으로 모인 어떤 조직에서 1977년에 갈라져 나와 결성됐습니다. 헬 드레이퍼는 — 여러분도 아마 그의 책 《사회주의의 두 가지 전통》[《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책갈피)에 수록]을 통해 접해 보셨을 텐데 —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라는 매우 설득력 있는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매우 영향력 있는 사상이 됐습니다.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는 개혁주의도, 당시 소련 사회도 대안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ISO는 결성 후 곧 국제사회주의경향에 가입했고, 그후 오랫동안 영국 SWP는 ISO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며 활동했습니다. 국제사회주의경향에서 ISO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ISO는 2001년 국제사회주의경향에서 분리했습니다. 직접적 사유는 ISO가 그리스 자매단체(사회주의노동자당 SEK)에 저지른 일[내분 일으키기]이었지만,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당시 전 세계에서 부상하던 반자본주의 운동의 중요성과 혁명가들이 이 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SWP 중앙위원회는 저를 1999년 11월 30일 시애틀 시위에 파견했습니다(당시 저는 중앙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위는 새로운 반자본주의 운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른바 ‘팀스터[미국 운수노조]와 거북이[환경 단체의 상징]가 단결한 시위였죠. 노동계급 조직들이 환경, 무역 등 여러 문제를 놓고 행동하고 싶어한 청년들과 단결했습니다.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집회가 끝나고 ISO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는 오늘을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 날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하며 연설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나치게 들떴던 것이었음지도 모르지만, 당시 ISO 대열은 위축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상황을 마주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너무 흥분하지 마, 찰리’ 하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ISO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 주장에 절반만 동의하는 사람들과 혁명가들이 어떻게 함께 활동할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ISO는 공동전선 전술을 현실에 적용하는 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제의 투쟁을 전진시키는 데에 일조할 태세가 돼 있지 않은 채, 그 문제에서 자신의 조직을 중심 요소로 여기는 종파주의의 고전적 정의에 꼭 들어맞게 굴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ISO 동지들이 있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맞서 벌어진 투쟁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부활을 알린 역사적 시위였다

동했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예컨대 ISO는 사형제 폐지 운동에서 활동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혁명가가 아닌 사람들과 체계적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 직후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트럼프 취임식 전부터 여성들이 대규모 행진을 벌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ISO는 내부 문건에서 회원들에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했다. 지금은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리 시위에 참가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트럼프 반대 운동에 동참하자는 주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ISO는 종파주의를 사상적 기회주의와 결합시켰습니다. 즉, 실천에서는 공동전선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론에서는 여성 차별 등 여러 쟁점에서 후퇴했습니다.

특히, ISO의 핵심 인물 새런 스미스는 여성 차별에서 남성이 득을 본다는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운 글을 썼습니다. 이 쟁점은 여성 차별에 관한 분석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가부장제 이론 지지자들 사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 차별에서 득을 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테면 미국 백인 노동계급이 인종 차별로 득을 본다는 주장에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혁명적 정치, 단호한 행동으로 규모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11월 23일 홍콩 항쟁 지지 시위

이런 배후사정에 따라 2018~2019년 ISO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ISO에서는 인종차별 문제, 흑인 회원들의 권리 문제, 미국 민주당원들과 관계 맺는 문제를 두고 격렬한 내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ISO 특별 대의원협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기존 지도부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흑인 회원들에게 별도 부문조직 결성을 허용하는 문제,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흑인들에게 협의회 방청을 보장하는 문제, 흑인 회원들이 조직 내에서 받은 대접에 대해 지도부가 공식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쟁점들의 옳고 그름을 다루

지는 않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임 지도부의 일원이 몇 년 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ISO 회원들은 향후 행보를 두고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고 놀라우리만큼 빠르게, 조직 해산 여부를 투표에 불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투표에서 70퍼센트가 조직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 투표했습니다.

ISO를 어떻게 평가하고 뭐라고 비판하든 간에, 회원이 1500여 명이나 되는 혁명적 조직이 미국에서 사라진 것은 전 세계 좌파에게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례는 혁명적 조직이 차별 문제에 잘못 대응했을 때 어떤 일

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교훈

남은 5분 동안 결론을 맺으면서 이와 다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답변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별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일들은 차별 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차별에 맞선 모든 운동에 깊숙이 뛰어들어야 하며, 우리가 그 운동에서 가장 굳건하게 싸우는 투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둘째, 단체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단체 내의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관해 충실한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자연대 동지들이 온갖 거짓말·음해·왜곡으로 점철된 역겨운 모함을 받아 왔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칙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영국 SWP도 그런 문제로 다섯 차례 풍파를 겪었지만, 저희는 저희 규칙 전체를 개정하고 행동 수칙을 제정해 신입당원에게 배포하는 자료집에 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매우 옳은 일이었습니다.

셋째로 정치적 명료함이 중요합니다. 그런 명료함은 마르크스, 레닌, 클리프의 저작을 모조리 탐독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지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개혁주의, 노동조합 관료주의, 자율주의에 대처하는 데에 필요한 주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들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사상을 명료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되도록 활동과 결합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는 나라마다 다를 테지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ISO 붕괴 이후 아주 소수, 그러니까 10~15명의 동지들이 우리 경향의 조직을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사상을 명료히 하고 ISO 붕괴 경험을 철저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지들은 2019년 3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조직해 냈습니다. ISO가 바깥 세계에 대해 외향적 태도를 취했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지를 고작 한두 명의 개인이 보여 준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급진적·혁명적 좌파 측이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배계급에게도 상황이 좋지 않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지배계급이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심해지면 심해지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점이 되면 40년 전에 크리스하먼 등이 말한 것처럼 투쟁 수위가 지금과는 질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갈구해야 하고 급진적·혁명적 좌파들이 기회를 놓친 것을 개탄해야 하지만, 동시에 조직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조직에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단련시킬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광범한 계급투쟁에 개입할 모든 기회를 탐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강력하게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역 천경록 / 녹취 한가은 / 교열 김준호



격동의 이라크·이란·팔레스타인

이라크 총리, 대규모 항쟁에 밀려 퇴진!

이라크 총리가 대규모 시위에 밀려 퇴진했다.

수도 바그다드와 이라크 남부 곳곳에서 두 달 가까이 유혈남자한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 끝에, 12월 1일 이라크 총리 아델 압둘 마흐디 사임이 의회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은 압둘 마흐디 사임으로는 부족하다며 거리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수도 바그다드에서 IT 전공 학생 다니야(20세)는 이렇게 말했다. “총리 퇴진은 우리의 산더미 같은 요구 중 티끌만한 일부일 뿐입니다.”

이번 운동은 10월 초 이라크인 수만 명이 반정부 대중 시위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사람들은 빈곤과 실업을 끝장내고, 2003년 미국이 침공 후 수립한 부패하고 종파 분열을 기초로 설계된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바그다드의 시위대는 타흐리르 광장을 중심으로 모여 도심 주요 도로와 다리를 점거했다. 시위대는 평범한 사람들의 출입이 거부되고 정부 건물이 있는 중무장 지역인 ‘그린존’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봉쇄했다.

바스라, 나시리야 등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대는 이라크 남부의 화수분인 석유 산업단지로 통하는 도로를 봉쇄했다. 이라크는 석유 수익이 막대하지만, 평범한 이라크인은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이라크 중부 도시 나자프에서 시위대는 이란 영사관에 최소 두 번이나 불을 질렀다. 시위대는 서방이 설계한 이라크의 부패한 체제를 이용해 이란이 이라크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분노한다.

탄압

이라크 정부는 여러 차례 학살극을 벌이며 시위를 유혈남자하게 탄압했다.

10월 초 시위가 시작된 이래 400명 넘는 사람이 죽었다. 이라크 시위 진압 부대는 최루가스나 시위 진압용 고무탄뿐 아니라 실탄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공격했다.

11월 마지막 주는 특히 더 피로 얼룩진 나날이었다. 바그다드, 나시리야, 나자프에서 약 65명이 죽었다.

충돌이 격화하자 이라크 시아파 최고성직자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가 총리 지지를 철회했고 이후 총리

가 사퇴를 선언했다.

이라크 의회는 앞으로 새 정부를 구성할 신임 총리를 지명하느라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라크 정치인들과 서방에서든 이란에서든 이들을 후원하는 세력 모두가 과정을 이용해 영향력을 키우려 할 것이다. 서방과 이란은 이라크와 석유를 통제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대는 종파주의 세력[이라크인 다수와 같은 시아파임을 내세우는 이란과 서방 어느 쪽에도 우호적이지 않다. 시아파가 다수인 도시에서 시아파가 다수인 정부에 맞선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수니파가 다수인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에서는 학생들이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 남부 도시에서 살해당한 시위대를 기리며 대규모 기도회를 열고 묵념했다.

시위대는 종파를 뛰어넘어 체제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다니야는 이렇게 말했다. “총리 퇴진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져 권좌에 있는 기성 정당들과 [이들과 연계된] 민병대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착촌 추가 건설 계획 발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공격 계획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이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이하 서안 지구)에 있는 도시 헤브론에 시온주의 정착촌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자 극우 정당 ‘유대인의 고향’의 대표인 나프탈리 베네트가 이 계획을 발표했다. 헤브론에 새 정착촌을 짓겠다는 것은 헤브론 구시가지의 팔레스타인 시장을 철거하겠다는 말이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강점에 맞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져 온 곳이다.

한 줌도 안 되는 이스라엘 정착자들이 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을 점거해서 그 지역을 통제하려 들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683호 / 번역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유대인 혐오자라는 거짓 비방이 노리는 것

[영국 유대인 절반 정도를 포괄하는 정통파 유대교 연합회] 랍비장 에프라임 미르비스가 노동당이 유대인을 적대한다고 비난하며 사실상 보수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제러미 코빈이 당 대표로 당선한 후 보수당과 노동당 내 블레이 지지자들[우파]은 유대인 혐오자라는 거짓 비방이 코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임을 금세 깨달았다.

사실 이런 거짓 비방은 에드 밀리밴드가 노동당 대표였던 2010~2015년에 이미 시작됐다. 다만 밀리밴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노동당에 대한 공격이 두 층위로 벌어진 것이 독특했다. 노동당 비방꾼들은 밀리밴드가 조금이라도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에 우호적이거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유대인 혐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밀리밴드에게 유대인 혐오를 에둘러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코빈을 상대로는 이 공격이 전면적이었다. 이는 그만큼 코빈이 팔레스타인 항쟁을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빈이 노동당 역사상 가장 좌파적인 당 대표이고 상당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구하는 공약을 내세우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자가 지금 거짓 비방의 주된 이유다. 특히 노동당이 야심찬 선거 공약을 공개한 후 코빈이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이 더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코빈이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은 완전 헛소리다. 그런데 이 비방이 이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뭘까? 내가 보기엔 이유가 두 가지다.

탈당

첫째, 노동당 우파의 구실이다.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만 해도 가장 강경한 시온주의자들[중동에 유대인만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치 신조]은 노동당 좌파에 속했지만, 지금 그런 자들은 노동당 우파에 속한다. 더구나 이스라엘 지지에는 무력으로 서방의 중동 지배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깔려 있다.([2003년 미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하도록 이끈 전 노동당 총리 토니 블레어가 대표적이다.)

[이스라엘 비판이 곧 유대인 혐오라는 비방이 권위를 얻은 것은 오직 노동당 우파가 코빈을 비방하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퍼뜨린 덕분이다.

최악의 비방꾼 몇몇은 자신들에게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마련해 준 노동당을 이제와서 버렸지만, 아직도 언론은 그런 자들의 허튼소리를 실어 주고 있다.

그러나 둘째로 이런 비방 캠페인은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에게 크게 유리해진 변화를 반영하는데, 이런 변화는 단지 영국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사회에서도 나타났다.

시애틀에서 20년 전에 시작된 대규모 반자본주의 운동만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항쟁에 강력한 연대를 표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스라엘이 2006년에 레바논과 전쟁을 벌이고 2008~2009년과 2014년에 가자 지구를 군사적으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공격했을 때 영국에서는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졌다. 이전 세대가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의 인종 격리·차별 체제]에 반대했다면 지금 청년층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흔했다.

이스라엘 비판을 유대인 혐오라고 비난하는 것은 해묵은 이스라엘 옹호 논리다. 1983년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인 아리엘 샤론[훗날 이스라엘 총리가 된]대은 <타임>지를 고소하며 <타임>이 유대인 혐오적 ‘피의 비방’을 한다고 몰아붙였다. 샤론은 당시 <타임>이 1982년 9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근 사브라·샤티라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벌어진 학살극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암시한 것에 반론했다.[그러나 몇 달 뒤 이스라엘의 자체 조사도 그 학살에 책임 있음을 인정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정체성 정치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비판을 유대인 위협으로 호도하려고 영국 같은 나라들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도록 부추겨 왔다. 이것이 코빈이 영국의 유대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는 진정한 배경이다.

유럽의회 등 공식 기구가 시온주의 반대를 유대인 혐오와 갈수록 동일시한 것이 이런 식의 정체성 정치에 힘을 실어 줬다.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열강인 프랑스·독일이 여기에 특히 적극적이다. 그 덕분에 국제홀로코스트추모위원회(IHRA)의, 지극히 의도가 수상쩍고 또 편파적인 ‘유대인 혐오’ 규정[“이스라엘의 존재를 문제삼는 것은 인종차별적 행동이다” 등이 퍼진 것이다. 노동당이 현명치 못하게도 그 정의를 수용했지만 코빈에 대한 거짓 비방이 털끝만큼도 줄지 않은 것은 코빈 반대파의 무자비함을 보여 준다.

한편, 인종차별적 편견에 기초해 유대인을 증오하는 진짜 유대인 혐오가 자라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극우가 이를 정치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요즘 극우는 이스라엘을 무슬림에 맞선 요새라 여기고 지지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잡탕 이데올로기에 유대인 혐오는 여전히 남아 있고 무슬림 혐오와 병존한다. 그러나 코빈 비방자들은 이 같은 진정한 위협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683호 / 번역 김준호

이란

학살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유가 인상에 맞선 이란의 시위 물결이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소요로 변했다고 한다.

11월에 시작된 이 시위에 지금까지 약 20만 명이 참가했다.

휘발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시위를 촉발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정부의 부패가 낳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였다.

시위대는 주요 도로에 차들을 대거 주차해 도로를 차단했다. 시위대는 자신에게 실탄을 쏘는 보안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 약 7000명이 체포됐고 최소 160명이 죽었는데, 실제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추산도 있다.



버니 샌더스(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맨 오른쪽)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이정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이 그린 뉴딜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당(DSA) 당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미국 정부가 교육·보건에서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노동당도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이 포함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 뉴딜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지지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정의당도 그린 뉴딜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11월 8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정의당의 경제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린 뉴딜 정책이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얻은 것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특별보고서(이른바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경각심을 부르는 촉매제가 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시대 이전의 평균 온도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재앙에 가까운 변화가 찾아온다. 재앙을 막으려면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퍼센

트(2050년까지는 탄소배출 제로)를 줄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2017년에 결성된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단체 '썬라이즈운동'이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별 반응이 없자 2018년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 집무실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국에서는 '멸종 반란' 운동이 일어나 올해 4월에는 트라팔가 광장 등 런던 시내에서 거대한 시위를 조직한 바 있다.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열망도 그린 뉴딜이 인기를 얻은 이유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된 반면, 사회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임금은 더 형편없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2018년 세계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상위 1퍼센트의 수입은 1980년 전체 소득의 10퍼센트에서 2016년 20퍼센트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하위 50퍼센트는 같은 기간에 20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감소했다.

그린 뉴딜의 정책 대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만하다. 예를 들어 버니 샌더스는 일자리 2000만 개 창출과 재생에너지 전환,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등을 제시했다. 영국 노동당은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는 고임금 녹색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단기간 내 화석연료의 사용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대체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탄소 제로 경제'로의 전환, 대규모 정부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 사회정의 실현 등을 추구한다. 그린 뉴딜 정책에는 일자리, 노동조합 권리, 보편적 주거와 보건의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그린 뉴딜 정책은 기성체제에 도전하는 급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나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민주당 주류 세력들조차 그린 뉴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30년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이래로 처음으로 사회경제적 의제를 노동계급에게 유리하게 재설정하자는 시도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린 뉴딜 정책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다.

그린 뉴딜 정책이 내놓는 친환경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정부가 많은 돈을 찍어 내면 이것이 마중물이 돼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현대화폐이론'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재원 마련

첫째, 정부가 많은 화폐를 발행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그 다음 번에 경기순환이 잘 이뤄져 산업 투자가 순조롭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윤율이 하락한다면 자본가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결국 자본가들의 투자에 달려 있고, 자본가들의 투자는 이윤율의 등락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앞의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정부의 초기 투자가 자본가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다면 정부가 발행한 막대한 화폐는 인플레이션만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화폐 발행만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누진세 강화나 부유세 등으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카시오는 최고소득세율을 70퍼센트 높이자고 주장하고, 엘리자베스 워런은 부유세를 메기자고 제안한다. 이런 정책으로 연간 2700억 달러 정도

(약 322조 원)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평등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가브리엘 주크만에 따르면, 워런이 내놓은 부유세 신설로 부자들의 자산 대비 조세 부담률이 3.2퍼센트에서 4.3퍼센트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대다수 평범한 미국인들의 자산 대비 조세 부담률 7.2퍼센트보다 여전히 낮다. 또한 미국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연간 7000억 달러(약 835조 원, 미국 GDP의 3.5퍼센트)에 달하는 국방비를 줄이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1930년대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추진했지만 미국 경제는 공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뉴딜 정책으로 자본가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려면 민간 투자 증가율이 지금 수준의 3배 이상은 돼야 한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윤이 낮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린 뉴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투자와 생산 등에서 우선순위의 변화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려면 기성체제의 유지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 금융, 국방, 기성 정치권 등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도전해야 하고, 이 사회의 생산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생산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것은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조직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가능한 것이다.



정의당도 진보적 경제정책으로서 그린 뉴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양효영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청년들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8~34세 청년 산업재해자 수는 1만 3129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 수는 91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자는 비슷하고 재해자는 오히려 1500명 가량 늘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18~34세 청년 재해자수 1만 1630명).

청년들은 김용균 씨와 비슷한 이유로 다치거나 죽어 갔다. 위험한 환경, 단독 작업, 안전 장치의 부재, 하청 구조 등등.

올해 7월 10일, 1년 차 27살 하청 노동자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가 사망했다. 홀로 작업하다가 갑자기 상승한 엘리베이터와 벽 사이에 끼여 죽은 것이다.

9월 11일에는 31세 하청 노동자가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중 옥상의 로프가 풀리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사했다. 안전 감독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별도의 구명줄도 없었다. 안전모조차 인증제품이 아니었다.

역대 최저 청년 실업률?

최근 청년 노동자 사망이 두드러진 곳은 배달업과 건설업이다.

플랫폼 산업 성장 이면에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다. 최근 3년간 일을 하다 사망한 18~24세 청년 중 44퍼센트가 오토바이 배달 중 변을 당했다. 그런데 정부가 ‘전속성’(하나의 기업에만 속해 일하는지 여부)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판단하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4월 10일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특성화고 졸업생 김태규 씨가 5층 높이에서 추락사했다. 사측은 실족사라고 하지만 김태규 씨의 작업 현장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취직이 어려워지자 일용직에 종사하는 20대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자격증이나 기술 없이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건설업 일용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이유는 심각한 청년 실업과 관계가 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단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뛰어드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은 참고 견디면서 좀더 안정된 일자리로 이직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런 기대는 거둬 좌절되기 일쑤이다.

문재인은 산재를 줄이는 데서도,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서도 별로 한 일이 없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12년 이래 최저 청년실업률(7.2퍼센트)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실제 청년 취업자 증가분의 대다수가 초단시간 노동자였다.

일자리의 질도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들 중 49.7퍼센트는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근로 여건 불만족”을 들었다. 첫 일자리의 임금이 월 200만 원 미만이었던 경우가 79퍼센트나 됐다.(통계청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나마 안정성과 임금이 보장되는 공기업과 공무원에 청년들이 쏠리는 이유다.

정부가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내세우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은 실업률을 줄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도다.

이런데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가 반드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중소기업 취업을 강조한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려던 박근혜 정부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에는 지난 3년(2017~2019년) 동안 과로사·과로



자살 산재가 벌어진 기업이 11곳이나 포함돼 있다. 과로사가 발생했지만 산재 인정은 받지 못한 곳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23곳으로 늘어난다.(신창현 더민주당 의원실)

이런 열악한 중소기업에 많이 몰리는 게 직업계고 학생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값싼 직업계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죽음의 현장실습 제도”를 부활시켰다. 고(故) 김동준, 김동균, 홍수연, 이민호 군 등 많은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제도를 말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매번 “청년”을 들먹이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자, 청년들의 문재인 지지율이 급락했다. 특히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실체가 드러난 시기에 냉소와 환멸이 컸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청년의 취업문을 좁힐까?

그런데도 문재인 지지자들은 20대 청년들이 박탈감을 표현하자 이것을

보수적 반발로 몰아갔다. 특히 조국 임명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소위 학벌이 높다는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모두 특권층도 아닌데다가, 극소수 지배계급 부모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식에게 계급 특권을 물려주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느껴며 반발하는 건 정당하다.

지난 수년간 고학력자 실업도 늘어왔다. 소위 높은 학벌을 획득하더라도 관참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 또다시 취업 관련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 비중이 높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20대 청년을 비난하자, 보수 우파들은 여기서 반사이익을 얻으려 애쓴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갈망을 이용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만연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기존 노동자들과 청년 실업자를 이간질하고 있다. 공기업 등에 입사한 일부 청년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공정하지 않이라며 반발했다(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 공정성으로 불평등이 해소될까?’ 〈노동자 연대〉 303호를 보시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청년들도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열악한 일자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도 이롭다.

관참은 일자리로의 취업문 자체가 좁다는 것은 청년 실업자 중 누군가는 저질 일자리로 가야만 한다는 걸 뜻한다. 김용균 씨도 한국전력에 정규직으로 취직하고 싶어 했지만 녹록하지 않았고 결국 하청업체로 취직해야 했다.

진정한 분단선은 청년 실업자와 기존 노동자 사이에 있는 게 아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기업주와 노동계급(다수 청년들도 노동계급의 일부이다) 사이에 진정한 분단선이 있다.

문재인의 잘못된 엉터리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기존 노동자와 청년 모두의 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 실업자,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정부를 향해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자본주의가 청년 실업과 저질 일자리의 근본 원인

청년들이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가들이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고 더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공격에 청년층은 특히 취약하다.

기업주들은 숙련도가 낮은 청년들의 신규 고용을 축소하고 기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게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1997년 경제 위기 전후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일단 전체 고용 규모와 함께 채용

규모가 대폭 줄었다. 또, 1996년에는 신규 채용이 전체 채용 규모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02년엔 5분의 1로 감소했고 경력직 채용 비중이 늘었다.

더 근본적으로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경향’이 실업을 더 악화시킨다. 기업들은 이윤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노동절약적 기술·기계에게 계속 투자를 늘린다. 이제 더 적은 노동자라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기업주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노동자를 해고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실업자를 “상대적 과잉인구” 혹은 “산업예비군”이라고 불렀다. “산업예비군” 중 일부는 취업이 상당히 불규칙적인 노동자 집단이다.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저임금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과잉인구의 생산은 이미 취업한 노동자들의 축출이라는 훨씬 눈에 띄는 형태를 취하거나, 추가적 노동인구를 통상적인 통로를 통해 흡수하는 것이 더욱 곤란해지는 형태를 취한다.”

이런 산업예비군의 존재 덕분에 기업주들이 기존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기가 수월해진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기존 노동자의 “과도노동”과 산업예비군의 “강요된 나태”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취업한 청년 노동자들도 다시 실업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윤을 위해 기존 노동자를 쥐어짜면서 청년들에게 실업과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정부와 기업주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 죽음의 책임이 있다.

청년들의 저항

최근 세계 곳곳에서도 청년과 노동자들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 부패 등 자본주의가 낳은 폐해에 불만을 키워 왔다.

특히 홍콩에서 청년 수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들도 한국의 청년들처럼 높은 실업률과 닭장 같은 주거에 고통받았다.

레바논, 칠레, 볼리비아, 페루 등 반란이 확대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20~30퍼센트에 육박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이 분노를 촉진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청년들의 반란은 노동계급의 저항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곤 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이윤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저항과 연결됐을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지금의 세계적 저항에서도 청년들의 거리 시위는 노동자 파업 등으로 이어지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의 간사 인터뷰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죽음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고인을 사망케 한 외주화의 철폐와 발전사 기업주 등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1년 전 그대로인 죽음의 발전소를 바꾸고,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12월 2일 현재] 92개 단체들이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를 결성하고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1주기 추모 주간을 진행 중이다. 12월 7일(토)에는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가 열린다.

발전 비정규직 농성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의 간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곧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입니다. 제 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평가를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약속했던 정규직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특조위는 다른 특조위와는 다르게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특조위 권고안 이행] 강제할 수 있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국민적 관심도 컸기 때문에 ‘설마 [문재인 정부]가 이것마저 배신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조위를 만든 이유가 ‘국민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 끌기였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계속 죽어 나가는 집배원, 조선소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여러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국민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나 싶어요. 권고안을 냈는데 이행도 안 한다면 특조위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김용균] 특조위의 핵심 골자는 이렇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해결하려면 노동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인 직접고용 형태가 가장 낫다. 그리고 노무비를 [하청업체가 착복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100퍼센트 지급해야 한다. 또, 1급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을 바꿔서 위험의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이태성 간사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발전소 노동자들만을 위한 권고안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권고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바뀌지 않고 있는 발전소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발전사가 유일하게 한 것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 폭로된 뒤] 마스크를 바꿔 준 것밖에 없는데, 그 마스크마저도 바뀌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원청은 ‘정산해 줄 테니까 특급 마스크 써’ 이렇게 공문 하나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하청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남아 있으니 그 재고 다 쓰고 특급 마스크로 바꿔 줄게’ 하고 있어요. 원청은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원청의 책임 강화 아닌가요?

김용균 사망 후 2인 1조 운영을 위해 인원이 1차로 170명 정도 늘었어요. 노조는 490명이 더 총원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1차] 이후로는 투입되는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돈이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부와 사측]의 의지가 없다고 봐요. 노동자를 여전히 소모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가 더 잘 싸워야죠. [김용균] 1주기를 맞이해서 발전소 현장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걸, 문재인 정부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려 합니다.



죽음의 외주화 철폐, 발전사 기업주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용균 1주기를 앞두고 광화문에 차려진 분향소

정부는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향신문〉이 이번에 우리 사회에 큰 물음을 던졌죠. 하루에 노동자 3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발전소 노동자들은 아침에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안전하게 일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자.’ 이게 우리 들끼리의 인사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날부턴가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얼굴을 꼭 보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했는데, 오늘 식사가 마지막 일 수 있으니까, 저녁에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엄청 슬픈 얘기고, 그렇게 자식들 얼굴을 보고 출근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노동자 1692명이 죽었다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숫자를 기억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 사망자 수]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반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을 걸 알고 있으니 반이라도 줄이겠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노동자의 안전을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와 법령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정부는 하위법령이나 대통령령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저희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결국은 [산업법 하위법령을] 더 후퇴시키고,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예요. 주 52시간 상한제도 노동계약으로 없애려고 하고요.

지금 발전소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인력 총원이 잘 안 되니까 휴가를 못 내요. 인원이 많으면 휴가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데, 원청인 발전사는 인력을 좀 총원해서 해결하는데 하청업체[에 속해 있는] 저희는 아직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는 어떤 상태인가요?

정부가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뻔해요. 산업통상자원부나 발전사 원·하청 업체들의 저항이 거세요.

그러니까 그냥 자회사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자회사가 발전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자기결정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회사가 아니면 사실상 무늬만 정규직인 거죠. [2월

5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책(자회사 방안)은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고용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여전히 원·하청의 구조가 똑같아요.

고 김용균 1주기를 맞아 12월 7일(토)에 추모 대회가 열립니다.

지난 겨울,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반쪽 짜리지만 산업법도 28년 만에 개정됐고 수많은 대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투쟁을 합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12월 7일에 1주기 추모 집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와 주신다면, 저희도 이 싸움 더 열심히 잘 해서 발전소가 죽음의 외주화 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인터뷰 이정원·신정환 / 정리 신정환

함께 참가합시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
일시 : 12월 7일(토) 오후 5시
장소 : 서울 종각역 네거리
주최 :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 추모대회 후 청와대 방면으로 촛불행진